

#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 선거운동 피켓 허용되나

민주 윤준병 의원, 국가·자치경찰 조직·운영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보자·유권자 자유로운 표현 보장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해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르지는 않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소관사무에 관련된 공무원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캠프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켓, 관뿔 등이 광고물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제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제90조 제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손피켓, 관뿔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신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라며 "피켓, 관뿔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김경수 기자

민주 이재명 대표 '김 의장

예산 중재안 수용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

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쯤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주째이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尹,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서 '균형발전에 도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가 사회의 분열이 아닌 통합의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제, 마무리 발언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관해서는 "연금 문제는 초당적 조계층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100분으로 계획했던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과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1

민주 김윤덕 의원, 19일

첨단기술 협력 수출증대 세미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윤덕 의원실이 주관하는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의 현황과 이들의 국제협력·수출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강훈식, 하태경 의원 등 여야 27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요 발표자로 나서는 가운데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첨단기술 분야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야심 찬 계획과 해외 수출 다변화 전략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산업계와 정부 부처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건설·인프라 K-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 등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라며 "여야 의원님들과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청·질병청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Joint Cyber Security Center, 이하 센터) 확대 개소식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해 15일 개최했다.

이 센터는 부처 간 예산·공간·시설 등을 공유하고, 관련 경험과 지식의 한데 모아 지능화·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365일, 24시간 공동 대응하게 된다. 해당 부처들은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정보보안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분석·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운영 중인 행정업무 체계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해킹 시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상시 관계 대응 체계(종합상황 점검, 외부 위협정보 감시, 유해경로 탐지분석, 침해사고 처리, 보안로그 분석 등)를 갖추게 됐다. 해당 부처들은 센터 운영에서 온라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식.

인 위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부처 간 적극적인 소통과 수평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관계시스템의 공동 구축·운영을 통해 구축비 약 88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6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공간·자원·예산·교육 등의 공유에 따

른 행정 효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윤석열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정보보안 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지역사회 발전·지방자치 활성화 기여

박혜숙·최용철 전주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주시의회 박혜숙(송전1동)의원,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기동 회장)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15일 수상했다.

두 의원은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혜숙 의원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전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오직 시민 위한 의정활동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최용철 의원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무주군의회,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지방소멸 대응 등 대안 제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희·시진)가 지난 11월에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정하고 무주군이 감사 지적사항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구정책지원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인구 감소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지적에 맞지 않거나 정보제한기간을 어기는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직위·직책에 맞게 규정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관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무주군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아동정책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6세 이상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여성과 목가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된다"며 방문돌봄지원서비스 강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이영희 위원장

조례개정과 관련 정책 입안을 주 문했고 주민 재보합에 적극 가입하고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에만 적용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를 기밀보일러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무주군청 청사가 지어지지 오래 돼 안전한 시설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업무환경도 열악하며 청사 확대나 이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한 일산화탄소 산지유형센터의 파행운영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운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지난 14일 열린 제20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입지컨설팅제도 지속 운영

전북지방환경청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인 '환경영향평가입지컨설팅제도'를 내년에 도 지속 운영한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 환경영향평가팀(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포함)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팀(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포함)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환경청의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고 15일 전했다.

환경영향평가팀 결과 '입지 적격'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변경되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시 처리기간이 단축(30일→10일)되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에정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합해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2012년부터 총 54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입지적합성을 검토해 '환경보전 방안 마련, 사업계획 변경, 입지 재검토' 등 적합한 대안을 찾도록 했다.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은 입지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입지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